
 금융위원회	<h1>보 도 자 료</h1>				 금융감독원
	보도	2016.10.27(목) 조간	배포	2016.10.26(수)	
책 임 자	금융위 금융제도팀장 홍 성 기(02-2100-2840)		담 당 자	이 영 평 사무관 (02-2100-2842)	
	금감원 감독총괄국장 김 동 성(02-3145-8300)			전 광 준 팀 장 (02-3145-8310)	

제 목 : 2016년 「검사·제재개혁」 현장 체감도·만족도 조사 결과

- ▶ FGI 결과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체감도·만족도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평가
- ▶ '건전성 검사', '확인서·문답서 폐지' 등 개혁 초기에 시행된 과제를 가장 체감
-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 법제화'에 긍정적 반응

I 조사 개요

- 금융위·금감원이 지난 1년여간 추진해 온 '검사·제재개혁'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층 실태조사

※ '15.4월 발표한 개혁방안의 초기 추진단계에서 '15.11월중 1차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개혁의 착근 여부를 평가하고 보완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금년에 재차 실시

< 실태조사 개요 >

- 조사 방식 : 심층 인터뷰 (FGI : Focus Group Interview)
- 조사 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16.8.12일, 8.16일 (2일간)
- 조사 대상 : '16년 상반기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 검사팀(내국계 10명, 외국계 4명), 금감원 검사역(6명) 등 총 20명
- 인터뷰 내용 : 금융회사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7개 주요 과제에 대한 체감도·만족도 및 개선의견

* ①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 구분 실시, ② 확인서·문답서 폐지 및 검사의견서 교부, ③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 ④ 개인·신분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 ⑤ 금융회사 자체징계 자율성 강화, ⑥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강화, ⑦ 제재개혁을 위한 주요 금융법 개정 추진

II 조사 결과

1. 전반적인 체감도와 만족도

◇ 인터뷰 결과, '15.11월 1차 조사에 비해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됨

- 인터뷰에 응한 금융회사 직원과 금감원 검사역 모두 1차 조사 ('15.11월)에 비해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 개혁의 성과와 영향에 대해서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번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당시에 비해 참여자들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평가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건전성 검사 구분 실시, 확인서·문답서 폐지 등 검사개혁이 본격 시행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금전제재 강화 등 제재개혁도 법제화가 계획대로 진행됨에 따라
 - 개혁 초기의 의구심이 해소되고 검사·제재개혁의 현장 체감도가 높아진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

2. 주요 개혁과제별 평가

①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 구분 실시

※ '15.7월부터 현장검사는 "건전성 점검 목적의 검사"와 "법규위반 점검 목적의 검사"를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중전에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혼재하여 실시)

- 금융회사 직원과 금감원 검사역 모두 1차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 이번 조사에서는 검사자료준비가 수월해지는 등 수검부담이 경감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견도 제시됨*
 - * '16.2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 담당국을 분리하는 금감원 검사조직 개편에 따라 건전성 검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데 따른 것으로 보임

• "컨설팅 검사를 통해 회사별 비교와 함께 모범사례까지 전파할 수도 있을 것임"
 • "검사자료 준비가 수월해지고, 검사·제재부담이 경감되는 측면이 있음"

② 확인서·문답서 폐지 및 감사의견서 교부

※ 그동안 감사결과 입증자료로 징구해 온 확인서·문답서를 '15.5월부터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대신 감사종료 직전에 감사의견서를 교부

- 금융회사와 금감원 모두 1차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확인서·문답서 폐지가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의견
- 확인서 등 징구 과정의 마찰이 사라져 감사장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는 의견이 이번 조사결과 두드러짐

• “확인서 서명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곤 했는데 폐지되어 찬성임”
• “금융회사 입장에서 수검부담이 완화된다고 개혁방안의 체감도가 높아짐”

③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

※ 감사현장에서의 금융회사 임직원 등 수검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15.7월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을 제정(감사·제재규정 시행세칙)

- 금감원 감사역들이 감사관련 제반절차를 준수하고 중복자료 요청을 자제하는 등 감사태도가 개선되었다고 평가
- 금융회사 측에서는 개혁방안의 완전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감사역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이상 1, 2차 공통)

• “감사역들의 매너가 좋아지고 감사장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음”
• “권익보호기준의 제정취지에는 공감하나, 금융회사보다는 금감원 감사역이 숙지할 내용으로 내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함”

④ 개인·신분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

※ 금융회사의 보수적 문화 혁신 및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신분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 추진('16.3월 감사·제재규정 개정, 관련 법개정 추진중)

- 1차 조사와 같이 이번에도 금융회사 직원과 금감원 감사역 모두 기관·금전제재로의 전환이 선진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
- 기관·금전제재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강화를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는 의견도 제시됨

• “개인 제재부담이 경감되니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고 일하게 됨”
• “기관에 대한 금전제재가 개인제재보다 강력하게 느껴져 회사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음”

⑤ 금융회사 자체징계 자율성 강화

※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 ‘조치의뢰’를 ‘자율처리필요’로 변경하고, 처리결과는 보고받되 처리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책임자 문책은 하지 않도록 함('15.9월 감사·제재규정 개정)

- 자체징계 자율성 확대에 대해 금융회사와 금감원 감사역 모두 바람직하다는 반응(1, 2차 공통)
- 다만, 금융회사의 자율적 징계조치에 대해 감독당국이 신뢰해 줄 것을 희망하면서도, 금융회사별 징계수준의 형평 문제도 제기

* 제도시행 초기이고 회사별로 내부통제와 사후관리 수준이 다르다는 점 등 감안 요망

• “금융회사 자율성 강화 방향에는 적극 찬성임”
• “기관별로 자체징계 수준이 다르면 형평이 안 맞는데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함”

⑥ 제재대상자의 반론권 강화

※ 제재대상 해당 여부를 신속하게 알 수 있도록 감사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재심의위원회 부의예정사실을 통지('15.7월 감사·제재규정 시행세칙 개정)

- 1차 조사와 같이 금융회사는 감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되고 제재심의 대상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 반면, 신속 통지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할 경우 사실관계를 소명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재차 제기

* 감독당국은 ①감사의견서 발부시, ②제재심 회의를 등 여러 차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일부 금융회사 의견은 제도에 대한 오해로 판단

• “진행과정을 매월 CPC(자료제출시스템)나 이메일로 알려주니 반론 준비에 도움이 됨”
• “금감원이 신속통지제도를 90일 이내로 경직적으로 운영하면 감사내용의 사실관계를 소명하는데 일정이 촉박해질까 우려됨”

⑦ 제재개혁을 위한 주요 금융법 개정 추진

※ 과태료·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금전제재의 형평성 제고,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제재시효 법제화,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금감원 위탁, 과징금 가산금 상한 설정 등

- 금융·감독당국이 제재개혁 관련 법제화를 본격 추진하면서 초기에 나타났던 개혁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다소 해소
- 특히, 금융회사는 5년이 지난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 법제화’에 긍정적 반응

• “가장 기대되는 것이 제재시효제도 시행임”

III 종합 평가 및 향후 계획

1. 종합 평가

- 실태조사(FGI) 결과, '15.11월 조사결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개혁추진 초기 단계에서 시행된 과제(건전성 검사·준법성 검사 구분 실시, 확인서·문답서 폐지 등)의 체감도가 높았음
 - 현재 법 개정을 추진중인 제재개혁 과제가 완료되어 시행될 경우 개혁에 대한 체감 및 만족도가 배가될 것으로 기대
- 다만,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완전히 안착되려면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완과 소통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2. 향후 계획

- 그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검사·제재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하위법규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
 - * 주요 금융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중이며,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1월중 국회에 제출 예정
 - *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
- 또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홍보와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장의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
 - * (예시) 신속통지제도 운영으로 소명기회 부족 우려 90일 신속통지 기준은 검사 결과 지연처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신속통지 이후에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참고1

제재개혁 이행을 위한 금융법 개정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현 금융제재는 ①금융회사 임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가 중심이 되어 보수적 행태를 유발하고, ②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는 실효성이 부족하며, ③금전제재는 부과금액이 낮아 징벌효과가 미흡
- ⇒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을 통해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 추진

* 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여전·신탁·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법

2. 주요내용

① 과태료 부과금액 현실화

-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가 최대 5천만원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하기에 부족
- ⇒ 주요 업권 중심으로 평균 2~3배 인상 (다만, 중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부담능력 등을 감안)
 -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 : 현행 과태료 수준이 대형 금융회사 제재에 충분치 않아 기관 1억원(현행 1~5천만원), 개인 2천만원(현행 1천만원, 보험업법은 2천만원)으로 인상
 -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신탁법 : 부담능력 대비 과태료 수준이 낮지 않아(1천~5천만원) 금융법별 형평 제고 중심으로 조정
 - 지배구조법 : 대형/중소형 업권에 함께 적용되므로, 법상 부과한도(현행 1~5천만원)는 인상하되 부과 자산규모 차이를 고려

② 과징금 부과금액 현실화

- 현행법상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부과

⇒ 법정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법 개정)하고, 5단계 금액 구간별로 체감 설계된 기본부과율을 폐지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begin{array}{|c|c|c|c|c|} \hline \text{법정부과한도액} & \times \text{기본부과율} & \text{기본과징금} & \pm \text{가중·감경} & \text{과징금} \\ \hline \text{(위반금액} \times \text{부과비율 인상)} & \text{(중대성} & & \text{및 조정} & \text{부과액} \\ & \text{기준으로 전환)} & & & \\ \hline \end{array}$$

③ 금전제재의 법률간 형평성 제고

-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법률마다 금전제재 여부와 부과수준이 상이한 문제를 개선하여 업권간 제재 형평성을 제고

* (예) 검사 거부·방해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 금융지주법 1천만원, 은행법 기관 과태료 없음(임직원만 부과), 보험·자본시장법 5천만원 → 1억원으로 조정

④ 제재시효제도 법제화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원칙적으로 5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 법 개정에 앞서 행정지도를 통해 금융회사 내규에 징계시효 반영('15.10월)

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

- 4개 금융법(자본시장·여전·전자금융·공인회계사법)에 既 도입
- 영업정지시 금융소비자 불편이 크거나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5개 업권 관련법(금융지주법, 은행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대부업법)에 추가 도입

⑥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금감원 위탁

- 과태료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 제재대상자의 편의 등을 위해 금융위의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되,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규정

참고2

「검사·제재 개혁방안」 세부 과제별 이행 현황

추진사항	당초 추진계획	진행상황
1. 검사들의 근본적 전환		
① 상시감시기능 보강	지속 추진	지속 추진
②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	‘16.1월 시행	완료
③ 조직 개편 및 인력 재배치	‘16.1월 시행	완료
2. 검사방식 및 절차의 쇄신		
가. 검사결과 입증방식 개선	즉시 시행	완료
나. 금융회사와의 의사소통 활성화		
① 「검사간담회」 개최	‘15.7월 시행	완료
② 「검사애로호소 핫라인」 유지	‘15.7월 시행	완료
③ 사외이사 면담 확대	‘15.7월 시행	완료
다. 검사처리기간 단축		
① 분리통보제도 활성화	‘16.1월 시행	완료
② 「검사결과 진행상황 통지제도」 도입	‘15.7월 시행	완료
라. 검사쇄신 이행을 위한 품질관리 강화		
① 이행상황 점검 품질관리 실시	‘15.7월 시행	완료
② 「검사평가회의」(가칭) 제도 도입	‘15.7월 시행	완료
③ 검사원 면책근거 마련 추진	‘15년중 추진	완료
3. 제재방식 및 절차의 쇄신		
① 개인·신분제재 대신 기관·금전제재 강화	‘15년 상반기 중 세부 추진방안 마련	완료 (법개정 추진중)
② 자체징계 자율성 강화 및 현지조치 활성화	‘15.7월 시행	완료
4. 금융회사의 권익보호 강화		
① 「검사원 복무수칙」 보완	‘15.7월 시행	완료
② 「권익보호담당역 제도」 실효성 제고	‘15. 2/4분기중 시행	완료
5.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①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강화	지속 추진	지속 추진
②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지속 추진	지속 추진
③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화	지속 추진	지속 추진
6. 금감원 검사인력의 역량 제고		
① 리스크 검사인력 확대 등 인프라 확충	지속 추진	지속 추진
② 리스크 전문 연수프로그램 개설	지속 추진	지속 추진
7.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①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	‘15.7월 시행	완료
② 금감원의 자료요구 제한 근거 마련	‘15년중 추진	완료
③ 외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검사실시 자체	지속 추진	지속 추진